

/ 도 내년도 국비 6조500억원 확보 /

지방도 건설비 확보 깜짝 실적...올림픽 1주년 예산 20억 깎아

도의 28개 중점 국비 현안사업 중 11개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의 신규 SOC 사업 감축 기조와 예산안 심의 막판까지 여야의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5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많은 6조500억원을 확보하면서 총액 면에서는 도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과 제전-영월 및 강릉-제진 동해선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제2경춘국도 동력 이어가=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사전기

도 현안 11개 반영 목표보다 5,000억 이상 늘어 '선방'

제2경춘국도 건설 기본조사비 반영 추진동력 이어가

경기장 활용 내년 재논의... 국비 확보 전략 미흡 속제

본조사비 2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또 총사업비 수천억원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비를 올해 신규로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국 자치단체들의 경쟁성 문제로 국비 편성이 안됐던 장대터널 전용 특수 차량 보강 사업비 1억원(한국도로공사 10억원 추가 계획, 총 11억원)이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명목으로 58억8,700만원을 확보해 강릉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되며 포항-삼척 동해선 철도 예산으로 1,000억원이 각각 국회에서 증액된 것은 도의 기대를 뛰어넘은 성과로 풀이된다.

■ 평창올림픽 후속 사업 차질 예상=그러나 도가 '올림픽 1주년 기념 여객인 평창' 사업비로 요청한 국비 30억원은 3분의 1 수준인 10억원 확보에 그쳤다.

행사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다.

여기에 경기장 사후활용은 내년 5월께 도출될 정부의 시설물 사후 활용 용역 결과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훈련비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국비 지원을 유력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올림픽 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별도 국비 편성 대신 평창조직위 잉여금 중 50

억원기량을 투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평창올림픽 레거시(유산)와 관련된 예산은 향후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 국비 확보 전략 속제 남아=도로 철도 등 SOC 관련 국비 실적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지만 미흡했던 도의 국비 확보 전략 등은 속제로 남았다.

제전-영월, 춘천-철원 고속도로, 강릉-제진 동해선 등의 국비 확보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남북산림협력센터, 동해 특성화육종연구센터 건립, 목호항 수변공원 주변 해상낚시공원 조성 등도

예산안에 명시되지 못했다.

전역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던 동해안 군 경제철책 철거비도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철책 철거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몫이라며 내년 예산에 총 250억원(군 직접사업 66억원, 지자체 보조사업 184억원)만을 편성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도가 추진했던 상광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힘들었던 올해도 국비 목표액을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iphong@kwnews.co.kr

동해항 3단계 1,322억...삼척~포항철도 3,177억

【동해·삼척】내년도 정부 예산에 빠져있던 동해·삼척지역의 신규 사업과 부족하게 반영됐던 사업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삼척시 미로~하장 국지도 28호선 건설(870억원)사업과 강원대 삼척캠퍼스 복합스포츠허브 신축(199억원)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동해·삼척지역 5천억대 국비 확보

반영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동해역·목호역 KTX 운영을 위한 시설개량 예산 20억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었고, 삼척~포항 철도사업 또한 1,000억원이 증액된 3,177억원이 확보됐다.

도계지역 무연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산 무연탄발전지원 예산도 당초 7억2,000만원에서 87억5,000만원이 증

액된 94억7,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석탄비축비 26억5,000만원도 반영됐다.

동해시의 경우 플드체인 허브구축 사업 76억8,000만원, 동해·목호항 환경개선사업 60억원,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조성 40억원,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11억원, 동해항 3단계사업 1,322억원, 동해항 북부두 개

축공사 38억원 등 총 1,630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신규로 반영된 예산으로는 무릉 3지구 폐쇄식장 문화재생 사업 10억원과 동해·목호 노후항만시설 보수 실시설계 비용 5억원이 포함됐다.

삼척시는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123억원, 삼척 원평지구 연안 정비사업 44억 5,000만원, 장호항 보수 정비사업 11억5,000만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25억원, 삼

척항 친수시설 조성 10억원 등 총 3,860억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신규 예산으로는 삼척항 문화·예술허브 조성 8억원, 전년 삼척 아트피아 45억원, 관동제1루 음성도시로의 시간여행 25억5,000만원이다.

이 외에도 동해안지역의 속원사업인 동해·삼척 등 군 해안철책 철거사업 관련 예산 250억원도 국회를 통과했다.

박영창·황민진기자

최문순 3기 첫 예산 6조2580억원, 쟁점사업 조건부 승인

알펜시아 매각팀 등 30건 감액
91건 증액, 농업예산 대폭 확대
동계AG준비·육아기분수당 포함
예산안 14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최문순 3기 도정의 첫 새해 살림살이가
사실상 확정됐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는 지난 8일 오전 8시쯤 77억 4630만원을 조정한 2019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 총규모는 6조 2580억원이다. 예결특위가 이날 자정 차수변경을 하는 등 22시간 동안 예산 조정작업을 벌인 결과 강원FC 운영 지원 예산 90억원 중 23억원이 삭감됐다.

또 상임위 심사에서 25억원 전액 삭감됐던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 지원 사업은 10억원을 깎아 15억원만 남겼고, 도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예산도 90억원 중 10억원이 줄었다.

2019 피어어아트쇼 개최(10억원)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9 강원도 당초예산안 주요 조정 내역

주요 감액사업 단위/천원				주요 증액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당초안	감액분	수정 예산액	사업명	당초안	증액분	수정 예산액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행사지원	2,500,000	△1,000,000	1,500,000	미시령터널 연구 용역	-	300,000	300,000
도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9,000,000	△1,000,000	8,000,000	도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15,200	230,400	345,600
2019 피어어아트쇼 개최	1,000,000	△1,000,000	-	도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4,000	72,000	96,000
강원FC 운영 지원	9,000,000	△2,300,000	6,700,000	발농업경영안정직불금	1,800,000	600,000	2,400,000
상품권 유통 추진	1,298,000	△120,000	1,178,000	고령지체소 주산지 토양복원	-	1,050,000	1,050,000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222,000	△100,000	122,000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	-	180,000	180,000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492,000	△229,600	262,400	(도의회) 국제교류 추진 여비	34,730	53,270	88,000

올림픽 부정전통 문화공연(2억 5000만원) 예산의 경우 전액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알펜시아 매각 T/F 팀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예산도 2억 2200만원 중 1억원이 깎였다. 또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2억 2960만원)과 대관령 겨울음악제 개최 지원(2억원), 미시령 힐링기도 홍보광고(7200만원),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1억 7200만원), 상품권 유통 추진(1억 2000만원) 등 모두 30건이 감액됐다.

반면 증액은 91건으로 감액사업보다 3배 많았다. 고령지체소 주산지 도양복원 10억 5000만원과 발농업경영안정직불금(6억원), 농농업경영안정직불금(4억 2000만원), 도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7200만원) 등 농림수산위가 권고한 농업분야 예산이 대거 늘었다.

국지도 28호선보수(갯재구간) 5억원과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2억원) 및 연구용역(3억원), 도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2억 3040만

원), 전통시장 택시쿠폰제(1억원) 등도 증액됐다.

최대 쟁점이 됐던 2021동계아시아게임 준비 예산 3억 8400만원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전기) 설치 63억원, 육아 기본수당 예산 243억원은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의견이 제시되는 등 내부 진통을 겪었다. 결국 레고랜드 전기 기반 시설 설치에 한전의 사업비 50% 부담, 육아기본수당은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 개최전까지 보건복지부 회의결과를

전제로 조건부 반영했다. 동계아시아게임은 남북이 공동개최한다는 단서를 달아 승인했다.

김병석 예산결산위원장은 "남북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들 예산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어진

내년 SOC예산 19.8兆... 정부안보다 1.2兆 증액

올해보다 8000억 증가... "경제 활력 시급" 4년만에 반등

2015년 이후 감소세를 계속하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SOC 예산 증액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면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SOC 예산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 2000억원 확대 편성됐다.

전년 대비 정부의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SOC 예산은 2014년보다 1조 1000억원이 늘어난 24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 SOC 예산은 23조 7000억원이었고, 2017년에는 22조 1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 원으로 20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줄인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반전됐다.

국회에서 SOC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4년 만에 SOC 예산 감소세가 멈춘 것은 다행"이라며 "전통 SOC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생활 SOC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내년 건설수주는 올해 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도내 주요사업 2019년도 국비 현황

주요 사업	정부안	국회	증액
출천-속초 동서철도	17억	10억	27억
제2경춘고속도로 사전기본조사비	-	2억	2억
동막-개마, 미로-하장 포진-문막 국지도건설 기본설계비	-	15억(각 5억)	15억
여주-원주 철도 실시설계비	30억	-	30억
국도31호선 방림-장평	114억	-	114억
국도42호선 정선-북면	20억	-	20억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2177억	1000억	3177억
동해항3단계개발	1322억	-	1322억
올림픽 1주년 기념 Agan 편찬	-	10억	10억
관리주체 확정 올림픽 3개 경기장 리빌딩	30억(특별교부세)	-	30억
동서녹색평화도로	60억	-	60억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43억8700만원	-	43억8700만원
한탄강 수상철리길 조성	34억	-	34억
폐광지역 도시재생	-	12억	12억
폐광지역 관광자원개발	82억6400만원	-	82억6400만원
양양오색자연휴양림지구	29억	-	29억
동해안군계철학책터	180억	-	180억
속초항크루즈터미널시설 증개축	63억	-	63억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12억	13억	25억
출천ICT 벤처센터 건립	-	10억	10억
b7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	17억8500만원	-	17억8500만원
세라믹원료산업 기반조성	13억5500만원	-	13억5500만원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원·하도급 가능

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년 유예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

속보=건설업계의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業域) 규제(본지 11월 8일자 6면)가 40여년만에 폐지돼 2~3년 뒤부터 무한경쟁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42년 이상 유지돼왔으나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어 건설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고 상호 원·하도급도 할 수 있도록 업역 규제를 허물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호 leeho@kado.net

조달청 437억원 규모 도내 시설공사 입찰

이번주, LPG배관망공사 등 6건

이번 주부터 강원도내 430억원대의 시설공사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오는 11일부터 한주간 도내 6건에 436억8300만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11일 한국엘피지배관망사업단이 발주한 117억9300만원 상당의 인제군 LPG배관망시설공사 입찰이 실시된다. 또 같은날 한국엘피지배관망사업단의 양구군 제1·2공구 LPG배관망 시설공사 입찰도 117억9100만원의 추

정가격을 기초로 시작된다.

이어 13일에는 인제군이 발주한 군도 3호선(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공사 입찰이 152억5900만원의 추정가격을 기초로 추진된다. 또 같은날 강원대가 발주한 제3학생회관 공사 입찰도 개시된다. 19억200만원의 신축공사 입찰과 1억7300만원의 전기공사 입찰로 구분돼 진행된다.

이밖에 14일에는 27억6500만원의 추정가격을 기초로 강릉원주대의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입찰도 열린다. 신관호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건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2년만에 허물어진 칸막이... 건설시장 지각변동 ‘서막’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갈라코고스 규제로 꼽혔던 ‘업역 칸막이’가 42년 만에 허물어지게 됐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영역을 넘볼 수 없게 했던 업역 칸막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건설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반응

업역규제 철폐, 생산구조 선진화 기대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도 뒷받침 돼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은 향상되고 업계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이원화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업역규제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 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이번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업역규제 폐지를 이루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역규제 폐지 등 규제혁신만으로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SOC 예산 축소, 적정공사비 부족, 노동·하도급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의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물량 축소되면 규제혁신의 효과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규제혁신과 더불어 SOC 투자 확대, 공사비 정상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건설업계도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4차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경쟁 저해,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불러왔던 ‘업역 칸막이’는 앞서 건설 선진화전략, 건설 선진화방안 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이 실패했다.

국토부는 앞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노사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여기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합의의 틀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간극을 좁혔다.

지난달 말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과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설법 개정안도 의결돼 공공공사 체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형 단일공사·소규모 복합공사
종합·전문업체간 경쟁 가속화

업역간 고질적 갈등 해소 기대 속
후유증 막을 보완책 서둘러야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국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40년 넘게 버텨온 업역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건설시장에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부터 ‘업역 칸

막이’ 제거가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설업체는 규모가 큰 단일공사에 직접시공 형태로 진출을 노리게 되고, 전문건설업체는 필요한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다른 전문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종합공사의 원도급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발주자의 선택 폭 확대도 건설시장은 시공역량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종합이나 전문 모두 자칫 업역 칸막이 제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역 칸막이가 없어지면 서로의 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서 업역 간 고질적인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설업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업역 칸막이 폐지가 되면서 건설시장에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부터 ‘업역 칸

박경남기자 knp@